

## 제351호 (2012. 3. 12)

---

### ■ 경제 동향

- 2월 CBSI 전월 대비 4.4p 상승한 66.7

### ■ 정책 · 경영

- 도시정비사업정책, 객관성 · 합리성 · 공정성 갖춰야
- 건설업 등록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 강화해야

### ■ 정보 마당

- 인도네시아의 경제 및 건설산업 현황과 전망

### ■ 연구원 소식

### ■ 건설 논단 : 주거 정책, 시민 이익이 먼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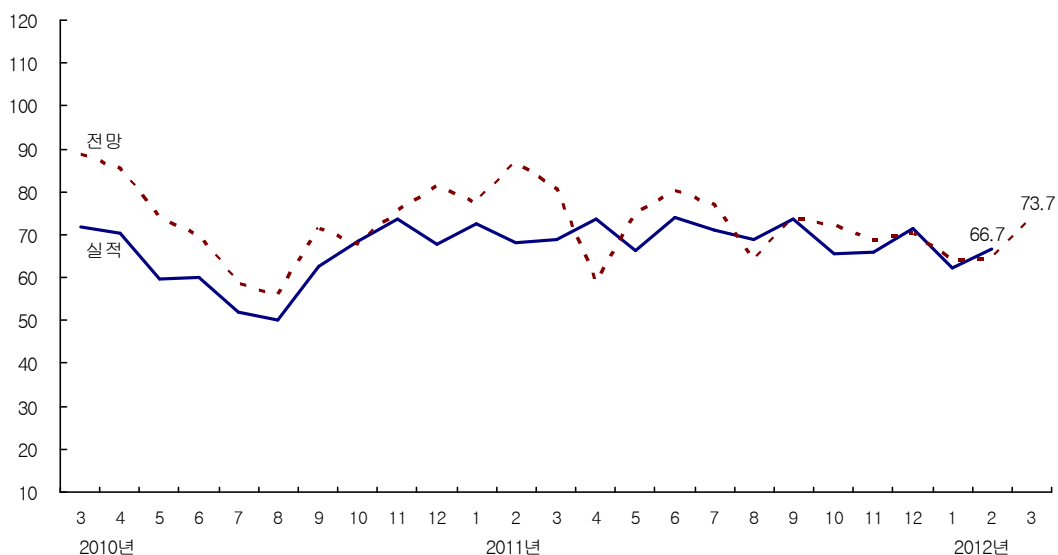
## 2월 CBSI 전월 대비 4.4p 상승한 66.7

- 통계적 반등, 계절적 요인 영향으로 소폭 상승 -

### ■ 2월 CBSI 4.4p 상승 ... 지수 자체는 여전히 60선으로 침체 지속

-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4.4p 상승한 66.7을 기록함.
  - CBSI는 지난 1월에 연초 공사 발주 물량의 감소와 그리스발 유로존 재정 위기 채무상 등의 영향으로 20개월 만에 최대 낙폭인 9.3p가 하락하면서 17개월 만에 최저치인 62.3을 기록했음.
  - 2월에는 전월인 1월에 CBSI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부진했던 것에 대한 통계적 반등과 통상 2월에는 1월에 비해 CBSI가 상승하는 계절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CBSI가 소폭 상승함.
  - 그러나, CBSI 상승폭이 전월의 하락폭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CBSI 자체도 여전히 기준선인 100.0에 훨씬 못 미친 60선에 불과하여 건설 경기는 아직 심각한 수준의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함.

■ 대형 및 중소기업체 지수 전월비 상승, 중견업체 지수는 하락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및 중소기업체 지수가 전월에 비해 상승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하락함.
  - 지난 1월에 전월비 6.4p 하락한 76.9를 기록해 5개월 만에 80선 아래로 하락했던 대형 업체 지수가 2월에는 전월비 16.0p 상승한 92.9를 기록하며 2월의 CBSI 상승을 주도함.
  - 작년 11월 이후 지난 1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13.2p 상승)했던 중견업체 지수는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부담감으로 2월에는 전월비 11.3p 하락한 58.3을 기록함.
  - 지난 1월에 25.0p가 하락하며 1월의 CBSI 하락을 주도했던 중소기업체 지수는 2월에는 전월비 8.8p 상승한 45.6을 기록함.

<업체 규모별 CBSI 추이>

구분	2011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년 1월	2월		3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종합	73.8	66.3	74.1	71.1	68.9	73.8	65.4	66.0	71.6	62.3	66.7	64.4	73.7	
규모 별	대형	107.7	76.9	83.3	84.6	76.9	100.0	84.6	84.6	83.3	76.9	92.9	69.2	85.7
	중견	58.3	66.7	73.9	72.0	75.0	73.1	68.0	64.0	68.0	69.6	58.3	72.7	78.3
	중소	51.8	53.6	63.6	54.4	52.6	43.9	40.0	46.4	61.8	36.8	45.6	49.1	54.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3월 전망치, 2월 실적치 대비 7.0p 상승한 73.7

- 한편, 3월 CBSI 전망치는 2월 실적치 대비 7.0p 상승한 73.7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7.0p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3월에는 건설 경기의 침체 수준이 2월보다 상당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3월에는 흑한기가 지나면서 공사 발주 물량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3월 CBSI 전망치도 이러한 요인에 의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전망 지수 자체는 73.7로 기준선인 100.0에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건설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여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흥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 도시정비사업정책, 객관성 · 합리성 · 공정성 갖춰야\*

- 주민 의사 반영은 필수적, 기존 사업의 매몰 비용에 대한 숙고 필요 -

### ■ 뉴타운 · 정비사업 관련 세미나 개최의 취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지난 5일 「최근 도시정비사업정책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본 세미나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뉴타운 · 정비사업의 출구전략들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장기적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음.
- 국내 경기 및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애물단지가 된 뉴타운 · 정비사업 출구전략이 획일적으로 급조될 경우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으므로 주민 · 조합원, 정책 당국과 이해 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발제 내용과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함.

### ■ 주제의 요지

- 도시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은 과거의 단순 부정보다 그동안의 공과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과 주민 합의(consensus)가 반영된 지향점을 먼저 정해야 함.
  - 지향점이 선행되지 않으면 용적률, 기부채납 등 사업성 위주의 논의에 함몰되어 찬반 갈등만 증폭되는 시행착오의 반복이 우려됨.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연착륙 시도와 향후 방향성 모색의 병행이 필요함.
- 출구전략의 공신력과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정책 당국의 반성과 함께 획일적 시행의 독단(dogma)에 빠지지 않도록 주거지 재생사업 위주의 전면적인 전환보다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방식 전환에 따른 신규 공급의 곤란으로 주택시장 내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현장 점검과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공급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http://cerik.re.kr>) 참조

- 출구전략을 위한 정족 수는 의사 결정의 왜곡이나 갈등 심화 등 후유증도 예상되므로 객관성과 합리성, 공정성이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함.
  - 다만 주민의 요청을 전제로 기존 규약을 우선하며 공공은 최종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여를 원칙으로 함.
- 기존 추진 사업의 매물 비용에 대한 지원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되, 우선 해당 지자체의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하면서 직접적인 지원보다 지자체의 보증을 통한 저금리의 장기 대출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임.
- 갈등 해소 및 공공의 전문적 지원을 위한 ‘주거재생지원센터’의 활용은 기존 관련 기구와의 통합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정보 제공, 갈등 조정과 현장 모니터, 분쟁 조정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음.

## ■ 토론 요지

- 기반시설의 확충 등 기존 정비 방식의 긍정적인 효과도 감안하되, 일정한 기간 내 주민 동의율을 완화하여 현행 사업의 진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신규 주택 공급의 필터링 다운 효과와 사회적 비용의 실질적·최종적 부담 주체 등을 면밀히 검토할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비 사업의 바람직한 선택 필요
- 주택시장은 침체 장기화 및 공공 개입의 확대 가능성, 뉴타운·정비사업의 정책 선회 등으로 조정이 진행 중이며, 향후 출구전략(비용 부담과 사업성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먼저 구한 후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의 보완이 필요
- 현재 뉴타운·정비사업은 수익성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향후 도시정비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나 조합 집행부에 해당 지역별 전문가를 공공 대표로 포함시키는 방안과 공공 및 민간 역할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갈등이나 분쟁의 단계별 대응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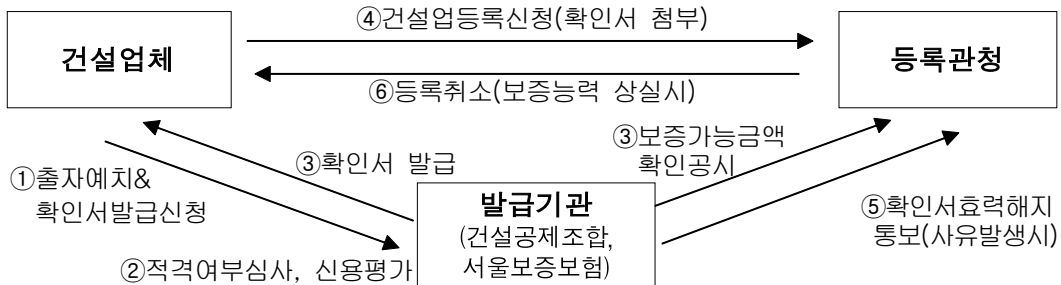
두성규(연구위원 · skdoo@cerik.re.kr)

## 건설업 등록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 강화해야

- 부실 업체나 페이퍼 컴퍼니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선 불가피 -

-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공제조합 등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건설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 등이 업종별 자본금의 20% 수준에서 담보 제공 또는 현금 예치를 받고, 자본금의 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계약이행이나 하자보수 등의 보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의미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및 운영 절차>



### ■ 공사당 거래 금액이 큰 만큼 위험도 커, 건설업 등록업자의 재정 능력 검증 필요

- 일부에서는 건설업에서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재정 능력도 건설업 등록 단계에서 법정 자본금을 갖추었는가를 단순히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존재
- 그러나, 건설업은 대량 생산과 유통을 통하여 소비자로부터 평가받는 제조업과 달리 발주자와 건설업체 간에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문제가 심각하고,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에 의한 소비자 피해와 시장 실패(market failure)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등록 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종합건설업은 공사 1건의 평균 수주 금액이 20억원 수준에 달하는 등 통상 거래되는 금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으며, 한계 기업의 부도나 하자보수 책임 기피 등 부적격 등록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소비자(발주자) 보호를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업자의 재정 능력에 대한 검증이 중요함.

- 과거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재정 능력이 없는 자가 건설업 등록시에만 일시적으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본금을 임시 차입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어, 특정 시점에서 단순히 자본금을 예치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재정 능력을 보증하기 어려움.
- 따라서, 발주자의 보호 측면에서 자본금의 일정 비율(예를 들어 20% 이상)을 예치하고, 신용 평가를 통하여 재정 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는 매우 유용하며,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페이퍼 컴퍼니나 부실 업체의 진입 방지에 가장 유용

- 등록 규제보다는 입찰 단계에서 스크리닝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국내의 공공공사 입찰제도는 문턱이 낮아 평균 경쟁률이 200:1에 달하고 있으며, 공공 발주자 측에서 행정 감사를 의식하여 입찰 단계에서 스크리닝이 용이하지 않음.
- 이와 같이 입찰 단계의 변별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페이퍼 컴퍼니나 부실 업체가 손쉽게 건설업 등록을 통하여 시장에 참여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건설업 등록 단계에서 스크리닝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진입 규제의 폐해로는 지대 추구(rent seeking)나 과점 시장 형성 등이 있으나, 건설업은 면허제에서 등록제 전환(1999년), 공제조합 가입 임의화(2000년), 겸업 제한 폐지(2008년) 등 시장 개방 정책으로 인하여 2012년 현재 종합건설업체는 1만 1,489개사, 전문건설업체는 4만 6,983개사에 달하며, 경쟁 강도가 매우 높은 상태임.
-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의하면, 건설업 등록업체 가운데 2011년도에 단 1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30% 수준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진입 제한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기보다는 오히려 공사 수주도 없이 등록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매몰 비용(sunk cost)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중장기적으로 건설 투자가 하락할 전망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등록 기준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촉진해나가야 할 시점임.
- 그동안의 운용 사례를 보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는 부실 업체나 페이퍼 컴퍼니의 진입을 억제하는 데 가장 탁월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소비자(발주자) 보호를 위해서는 앞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최민수(연구위원 · mschoi@cerik.re.kr)

## 인도네시아의 경제 및 건설산업 현황과 전망\*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0~14년)으로 경제 및 건설산업 성장 기대 -

### ■ 경제 현황 및 전망

- 세계 경제가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경제도 2010년 4/4분기에 예상 외의 성장을 하였음.
- 세계은행(World Bank)은 인도네시아의 2011년과 2012년도 경제성장률을 각각 6.4%, 6.7%로 전망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거시경제 지표>

구분	GDP성장률(%)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환율(IDR/US\$)	배럴당 유가(US\$)
2011년	6.8	5.8	5.3	9,200	80
2012년	6.4~6.8	6.2~6.4	4.9~5.3	9,100~9,300	80~85

자료 : 인도네시아 재정부.

-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하여 2010년 2월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0~14년)을 수립·발표함.
- 이 계획은 관료 정치의 개혁, 교육, 보건, 빈곤 퇴치, 식량난 해소, 인프라 건설, 투자, 에너지, 환경, 오지 및 낙후 지역 개발, 문화 및 기술 혁신 등 주요 11개 분야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계획의 시행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평균 5.5%에서 2014년에는 7.3%로 확대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6.3% 내지 6.8%로 예상됨.

### ■ 건설산업 현황 및 전망

- 인도네시아의 최근 인프라 투자는 GDP의 3.0~3.5%이며, 대부분이 재정투자이고 2000년에서 2006년 기간 중 민간투자는 GDP의 약 1% 정도였음.
- <2006~10년 간 국가 인프라 건설 예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10년 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건설을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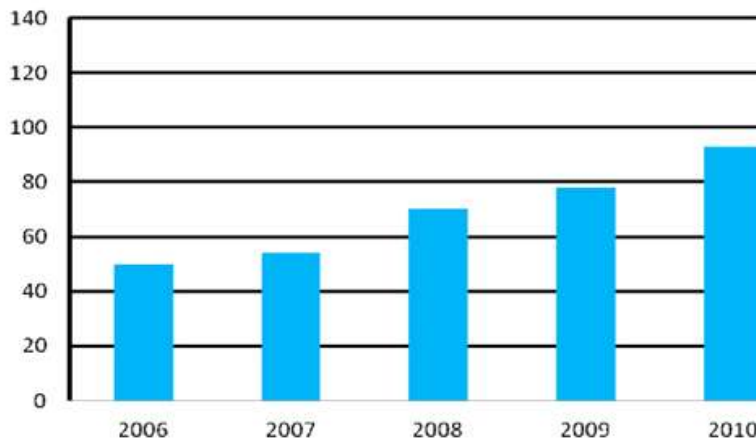
\* 본고는 IFAWPCA 제39차 대회(2011. 11. 15~18, 홍콩)에서, 인도네시아건설협회(ICA)가 제출한 국가 보고서 중 주요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



- 그러나, 향후 5년 간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할 전체 인프라 건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여 정부의 인프라프로젝트추진위원회는 민간 부문의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2006~10년 간 국가 인프라 건설 예산>

(단위 : US\$ 백만)



자료 : 인도네시아 재정부.

- 인도네시아의 건설시장은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부문, 그리고 자원 개발과 연관된 산업 부문의 건설에 힘입어 2003~10년 간 평균 7.6%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2011년부터 15년까지의 5년 간 평균 8.1%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 2011년 3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도로, 항만, 철도, 교량, 발전소, 수처리 시설 등 다방면에 걸쳐 320억 달러 규모의 16개 공공 민간 합작(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s) SOC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그러나, 인프라 프로젝트의 입찰과 관련하여 부정 부패와 투명성 결여로 현재 16개 프로젝트 중 5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2010~14년 간 건설산업 성장률>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성장률(%)	7.1~7.2	8.4~8.5	8.8~9.3	8.9~10.1	9.1~11.1

자료 : 인도네시아 국가개발부.

김영덕(연구위원 · kyoduk@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및 세미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3. 5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제도와 주최, 적격심사낙찰제 개선협의체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이승우 연구위원 참여</li> <li>- 적격심사낙찰제 공사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li> </ul>
3. 7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산관리과 주최, 시유 재산 운용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li> <li>- 중장기적 차원의 시유 재산 운용 계획 수립 및 민간 협력을 통한 시유 재산 활용 방안 검토, 공공 건축물의 주민 활용 복합청사 조성</li> </ul>
3. 8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산업공생발전실무위원회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li> <li>- 보증 거부 확대 방안 및 보증금 지급 요건 완화 방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률 제고 방안, 신기술 품셈의 원가 반영 방안, 상생 협력 펀드 활성화 방안 등 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주택건설추진단 주최, 보금자리사업 민간 참여 TF 2차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실장 참여</li> <li>- 보금자리사업 민간 참여 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한 논의</li> </ul>

■ 「최근 도시정비사업 정책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 개최

- 연구원은 3. 5(월),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주택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1주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이 △뉴타운 출구전략 등 중요 정책의 변경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와 △도심 주택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주택 가격 불안의 우려를 제기하였음. 제2주제를 발표한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연구위원은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사업 구역의 40%를 해제할 경우 서울시 주택공급량의 절반이 줄어들어 주택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하였고, △주민 간 갈등 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함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음.
- 종합 토론에서는 박환용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의 사회로 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음.

■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무 과정’ 개설

- 기간 및 장소 : 3. 13(화)~15일(목), 건설회관 9층 연수실
- 교육 내용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전망과 동향/자금 조달/PF 사례 연구/현금흐름 분석 등 실무를 중심으로 구성
- 문의 및 참조 : 교육팀(02-3441-0691, 0848),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 주거 정책, 시민 이익이 먼저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자산 가치 증식의 수단으로 환영받던 뉴타운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한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가 모두 출구전략으로 근사하게 포장한 해법 마련에 분주하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치러질 총선과 대선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민심의 향방을 고려해 선심성 대안이 담긴 정비사업 관련 법률을 작년 말에 개정했다. 국토해양부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안)을 지난해 8월 확정 발표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1월 말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신규상은 원칙과 핵심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부동산시장에 적용하고 시민이 공감하며, 궁극적 목표인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데는 적잖은 한계가 엿보인다. 먼저 서울시의 이번 뉴타운 출구전략은 전면 철거 방식 위주에서 주거지 재생사업 위주로 전환한다는 것인데, 기존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만 부각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은 또 다른 시행착오와 주민 의사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반적인 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주택 공급 부족 불안감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서울 시내에서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하고는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주택 공급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수급 불균형 논란은 하향 안정세에 있는 주택 가격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더욱이 서울시가 재건축 소형주택의무비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재건축 현장 주민들은 가뜰이나 아파트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마당에 기존 규모보다 작은 소형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자칫 재건축사업 자체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타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출구전략까지 마련된 마당에 재건축까지 위축된다면 신규 주택 공급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그동안 가격 급등세로 전세 대란을 겪은 임대차시장에 이전보다 더 큰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현실적으로 기존 추진 사업의 매물비용 보전도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서울시는 매물비용 일부를 중앙정부 등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등 공공 지원을 강화하려 하지만 개정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경기도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다른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난을 완화하려는 의도에는 공감한다. 다만 향후 주택 수급 불균형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에 유념하면서 시장과 소통하고 시장에 적용이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론을 강구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매일경제, 2012. 2. 23>

김흥수(원장 · infra@cerik.re.kr)